



공정거래위원회

편집책임 : 정신기 (200-4081)

편집담당 : 양철진 (200-4090)

공정위 관련 주요기사 모음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대 변 인 실

오늘의 주요기사

2025년 01월 15일 (수)

순서	제 목	매체	카테고리	페이지
1	삼성, 웨어러블 로봇 '봇핏' 출시 초읽기	매일경제	종합	1
2	배스킨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돌려달라"	매일경제	사회	2
3	알리·테무 등에 86종 '판매 차단'	경향신문	사회	3
4	"이사회 의장 내려놔... 백년기업 이끌 사람이 경영 맡아야"	조선일보	경제종합	4
5	롯데·SK 3세가 샌프란시스코에 간 까닭은...	국민일보	종합	4
6	금값 된 딸기, 수출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다	중앙일보	종합	5
7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우울한 예측' 최악의 소비부진 당분간 계속될 듯	중앙일보	경제	5
8	삼바 '역대 최대' 2조원 위탁생산	조선일보	경제종합	6
9	통상임금 대혼란...고용부도 "지침 내겠지만 많이 부족할 것"	중앙일보	경제	6
10	한은 "추경, 경기 둔화 대응 정도면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	동아일보	경제 금융	7
11	"트럼프 2기 출범 후 일괄 관세 부과하면 한국 수출 큰 타격"	조선일보	경제종합	8
12	미국, 금리인하 끝났나 1월 동결 확률 97% "인상 국면 진입" 전망도	중앙일보	경제	9
13	'고용 호조' 미국, 매파 득세...한은, 금리 섣범도 꼬여	중앙일보	경제	9
14	배럴당 80달러 치솟는 국제유가 5개월만에 최고	동아일보	경제 금융	10
15	로보락·샤오미·비야디... 한국 안방 공략하는 중국산	한국일보	오피니언	11
16	'MAGA 파트너'로 뛰는 韓 기업들, 희망은 있다	동아일보	오피니언	12
17	한국경제 골든타임, 10년도 안 남았다	중앙일보	사설/칼럼	13
18	1%대 저성장 시대, 어떻게 봐야할까	한국경제	오피니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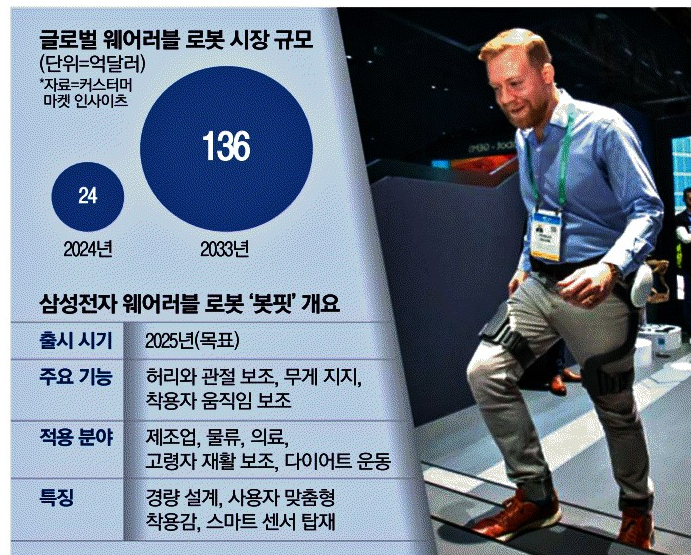
삼성, 웨어러블 로봇 ‘봇핏’ 출시 초읽기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허리·관절등 움직임 보조
이르면 상반기에 나올 듯
집사로봇도 韓美 곧 출시
‘레인보우로보’ 자회사 편입

삼성전자가 올해를 로봇 사업 도약의 해로 삼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해를 맞아 기술 혁신과 로봇 상품화에 속도를 내고 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낙점된 로봇 분야에서 올해 웨어러블 로봇 ‘봇핏’과 집사 로봇인 ‘블리’ 등이 연이어 출시되며 로봇이 삼성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올해 로봇 사업의 첫 행보로 웨어러블 로봇 ‘봇핏(Bot Fit)’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는 상용화 시점이 가까워져 실제 시장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보행을 돕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봇핏’을 장착한 모습.

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봇핏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봇핏은 허리와 관절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이다.

경량화 설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센서, 스마트싱스와의 연동 등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을 총망라한 혁신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품은 제조업과 물류, 의료, 재활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재활 의료용, 다이어트 헬스케어 운동용, 산업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봇핏에 대한 구체적인 출시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봇핏 설계를 맡고 생산은 핵심 협력사에 맡기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삼성전자 로봇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봇핏뿐만 아니라 삼성의 또 다른 야심작이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가정용 집사 로봇인 ‘블리’를 한국과 미국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CES 2025에서 “삼성전자는 로봇 분야에서 늦었지만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기존 2대 주주였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더 확보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업결합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소라·이상덕 기자

배스킨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돌려달라”

롯데슈퍼·BHC 이어 소송전
SPC측 “별도 가맹금 안받아”

배스킨라빈스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에도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와 치킨 업체 bhc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피자헛발로 시작된 차액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비알코리아가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이에 마진을 붙여 적정 도매가보

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뜻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승패를 가른 것은 본사와 점주 간 합의 성립 여부였다.

비알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면서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SPC 측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는 상품 마진을 제외한 별도 매출 수수료나 로열티, 광고비 명목으로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아 앞서 이슈가 된 피자 업체(피자헛) 사례와 다르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해외 직구 제품 다수, 발암물질·중금속 기준치 초과

알리·테무 등에 86종 ‘판매 차단’

해외 직구 제품 다수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해 기준치를 초과한 인체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아마존 등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590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이들 제품을 구매해 국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가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확인했을 때도 6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257개, 금속 장신구 283개, 자동차·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석면이 함유됐을 것으로 우려된 제품 50개 등이다.

제품군별로는 생활화학제품에서 40개, 금속 장신구에서 38개, 석면 함유 제품에서 8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

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자동차·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8개 제품에는 발암물질인 백색면이 2~10%가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백색면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물질’은 취급이 제한돼 있다.

방향제 등 40개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비롯해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금속 장신구 38개 제품에선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측에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3300개 제품을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된 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됐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이사회 의장 내려놔... 백년기업 이끌 사람이 경영 맡아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1대 주주인 영풍은 작년 9월 13일 사모 펀드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 2대 주주 측인 경영자인 최윤범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 등으로 맞서면서 지난 4개월간 분쟁 속 누구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측은 이사회 구성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이다. 국내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아연·동·은 등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의 한 축이라 경영권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크다. 임시 주총을 앞두고 본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을 잇따라 만났다. 첫 순서로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의 인터뷰를 듣는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만난 최 회장은 “나는 이미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앞으로 지분이 얼마 든 간에 가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맡는 회사로 지배 구조를 개선해, 고려아연을 백년 기업, 국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기관 투자자 등 소수 주주의 목소리를 키워, 현 경영진이 다른 전문 경영인이든 겸직된 사람에

게 회사를 맡기는 구조를 만들 테니,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지치해 달라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임시 주총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 마음을 얻기 위해 겸허하게 노력 중이다. 장기적으로 회사가 잘되려면 제3의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 투표제가 통과돼 주주들이 현재 경영진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후 실적이나 지배 구조 개선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로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며 더 개선된 지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의 승리다.”

— 미래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MBK 측도 하겠다고 했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고려아연이 가진 세계 1위 기술력을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소재, 금속 리사이클링(재활용) 등 세 가지 분야에 적용해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한 결과다. 예를 들어 배터리 소재는, 고려아연의 니켈 사업 경쟁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몇 년 씩 찾으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을 수정해왔다. MBK 같은 사모 펀드들은 대략 10년 안팎에 회사를 매각해 투자금 회수를 해야 할 텐데, 고려아연을 경



남경호 기자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만난 최윤범 회장은 “앞으로 지분과 무관하게 가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구조를 만들어 고려아연이 국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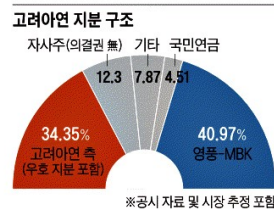
**“소수 주주들 목소리 키우고
회사의 지배구조도 개선해
국민 기업 될 수 있도록 할 것**

**MBK, 10년 뒤쯤 회사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텐데
기술적·경험적 부족한 시간”**

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경험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이런 설계도가 있다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현 경영진이 더 낫다는 근거는?

“지난 수십 년간 저와 저희 가족들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일지

2024년 9월 13일	영풍+MBK,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발표
10월 2일	고려아연 ‘잇볼’ 자사주 공개매수 발표
14일	MBK 측, 지분 5.3% 추가 확보하며 공개매수 종료
23일	고려아연 측, 자사주 9.85% 확보하며 공개매수 종료
30일	고려아연,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
11월 1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 후 사과
12월 6일	양측의 지분 매수 경쟁 속 주가 장종 240만7000원 기록
2025년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예정)

부가 고려아연을 세계 제1의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글라스루이스를 비롯한 주요 국내외의 의결권자 지분 기관들도 현 경영진의 성과를 인정하며 현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영풍은 폐수 무단 배출 등의 문제로 제련소 경영이 어려운데, MBK 측이 경영권을 가질 경우 고려아연 자원을 영풍에 지원하는 등 이해 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누구도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 때마다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 같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시 주총과 정기 주총이 끝나면 MBK 측과 앞으로 방항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회에 MBK 측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경영 방향을 협상해야 할 것 같다.”

— 한국 기업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분쟁이었다. 느낀 점이 있다면?

“대규모 자금으로 공개 매수가 들어오고, 여러 이슈로 상대가 고발과 진정을 쏟아내는 상황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도 우리 회사가 뚝뚝 뚫렸다는 것에서 힘을 받았다. 최윤범이란 사람이나 지금 경영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단결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지 주주와 국민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나 원아시아 펀드 투자, 철화한 유상증자 등 이사회가 회장 견제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의 경우 앞으로 이사회를 거쳐게 하는 등 장치들을 만들어 고쳐나갈 생각이 다. 다만 투자 손실이 크다고 비판하는데 확정된 손실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만기가 되는 시점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또 이사들이 ‘거수기’로 회장 말만 따른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한국·이정구 기자

국민일보

롯데·SK 3세가 샌프란시스코에 간 까닭은...

**바이오 신산업 공략 JPMHC 참석
롯데 ‘바이오캠퍼스, 생산전력소개’
SK ‘중장기 캐시카우 확보에 주력’**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이끌어 갈 후계자들이 글로벌 빅파마(대형 제약사)가 총집결하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성과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부사장이 주인공이다. 두 그룹은 차세대 동력으로 제약·바이오 사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신사업 분야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 부사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 참석해 브리스톨 마이어스스콧(BMS), 존슨앤존슨(J&J), 암젠 등 세계적 제약사들의 발표를 청취하고 바이오산업 최신 동향을 살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JPMHC에는 전 세계 550여개 기업, 8000여명의 투자자·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에 나서고 있다.

2023년 12월 롯데그룹 정기 임원 인사로 바이오로직스에 합류한 신 부사장이 글로벌 바이오 행사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롯데 지주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겸하고 있다. 이



롯데 신유열

SK 최윤정

번 JPMHC를 계기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에도 나서는 등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제임스 박 신임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롯데지주 관계자들이 이번 행사에서 신 부사장과 동행했다.

롯데그룹은 2022년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고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6일 JPMHC 무대에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의 구축 현황과 뉴욕 시러큐스 캠퍼스의 ADC(항체·약물접합체) 생산시설을 소개하고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SK바이오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인 최 부사장은 이종훈 대표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JPMHC에도 참석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SK그룹은 지난 연말 정기인사에서 최 부사장을 지주사의 ‘성장 지원’ 담당으로 발탁하며 그룹 차원에서 투자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임무를 맡겼다. 생화학 전공자인 최 부사장은 2017년 SK바이

오팜에 입사해 바이오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쌓고 있다.

SK바이오오팜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 국명 엑스코프리)를 이을 캐시카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규 모달리티로 RPT(방사성의약품 치료제), TPD(표적단백질분해 치료제)를 선정해 매출 구조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후계자들이 글로벌 유망 사업이자 그룹의 미래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에서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비전을 보여준다면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김성훈 기자
hunhun@kmb.co.kr

금값 된 딸기, 수출 때문에? ... 생산량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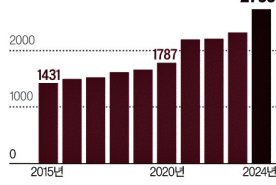
기상이변 겹쳐 딸기값 10년새 2배
44% 댔 김값은 수출 급증이 원인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와 국민 반찬인 김의 가격이 고공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출 증가로 국내에 풀리는 물량이 적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1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딸기 소매가격은 100g당 2312원(13일 기준)이다. 평년보다 15%가량 비싸다. 10년 전인 2015년(이하 12월)엔 1431원이었고, 2021년부터 2000원대에 진입해, 지난해 2730원대까지 올

10년 만에 두배 된 딸기값

단위: 원, 매년 12월, 100g당 소매가격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랐다. 이 기간 수출도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3218만 달러였던 딸기 수출액은 8년 만인 지난해

6786만 달러로 증가했다. 싱가포르·홍콩 등 소득 수준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딸기에 대한 인기가 많아졌다.

하지만 수출 증가가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출량이 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의 5%에도 못 미치는 때문이다. 신지영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출하 시기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아직은 수출 비중이 작아 가격과 연결하기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딸기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은 생산량 감소다. 국내 딸기 생산량은 2019년 23만4000t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 20만

t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이상고온 등 날씨도 문제였다.

반면에 김 가격이 최근 치솟은 건 수출의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다.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513원(13일 기준)인데, 1년 전(1054원)보다 43.5% 급등했다. 2010년 1억1000만 달러였던 김 수출액은 2023년 7억9000만 달러(약 1조1560억원)로 618%나 증가했다. 수산식품 단일 품목이 수출액 1조원을 넘긴 건 처음이다.

김 소비 비중은 2020년까지만 해도 내

수가 55%, 수출이 45%였다. 하지만 2021년 수출이 역전했고, 2023년엔 수출 비중이 약 63%까지 솟았다. 수출이 잘 되다 보니 국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김 생산을 늘리는 게 대안이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 영세한 김 양식 여가가 많고, 인력 고령화도 심각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다만 새해 들어 김값은 서서히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마른김을 만드는 물김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The JoongAng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B02면 경제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우울한 예측’ 최악의 소비부진 당분간 계속될 듯

대한상의, 유통업체 500개 조사
소매유통 경기 전망 3분기째 하락
“대규모 할인행사 등 대책 서둘러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소매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소비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체의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유통업체 대상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RBSI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난해 RBSI는 1분기 79에서 2분기 85로 반등한 이후 3분기 82, 4분기 80, 올 1분기 77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전망치는 모든 업체에서 하락했다. 백화점(91→85)이 전 분기 대비 6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대형마트(90→85)와 슈퍼마켓(81→76)도 고전이 예상됐다. 백화점은 핵심 카테고리인 명품 가격 인상이 실적 방어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대형마트의 경우 설 명절 특수가 있지만, 고물가가 이어지고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도 치열해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슈퍼마켓 역시 경기

침체 장기화의 여파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불황에 강했던 온라인 쇼핑(76→74), 편의점(74→73) 업계의 경기 전망치가 하락한 점도 눈에 띈다. 온라인 쇼핑은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초저가를 앞세운 차이나커머스의 공세가 올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편의점의 경우 1분기는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비수기이고, 점포 수 증가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져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업들은 올해 국내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복수응답)으로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66.6%), 비용 부담 증가(42.4%), 트럼프 통상정책(31.2%), 시장 경쟁 심화(21%) 등을 꼽았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8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도 절반 이상(56.2%)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국내 소비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얼어붙고 있는 소비심리를 녹일 수 있는 대규모 할인행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소비 진작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삼바 '역대 최대' 2조원 위탁생산

유럽 제약사와 초대형 계약 체결
작년 전체 수주액의 40% 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CMO) 계약을 수주했다. 2011년 회사 창립 이래 체결한 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유럽의 제약사와 14억1011만달러(약 2조747억원) 규모의 대형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5조4035억원)의 40%에 이르는 액수다.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미국의 제약사와 1조4600억원 규모 계약을, 10월에는 아시아의 제약사와 1조702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마

다 최대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수주액은 2022년 1조7835억원, 2023년 3조5009억원, 2024년 5조4035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76억달러를 돌파했다”며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수주 확대에 호실적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액 4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착공한 제5공장은 18만L 규모로 오는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수준인 총 78만4000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41건, 유럽의약품청(EMA) 36건 등 총 340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 박지민 기자

The JoongAng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B05면 경제

통상임금 대혼란... 고용부도 “지침 내겠지만 많이 부족할 것”

지난달 19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린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의 후폭풍이 거세다.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OT), 개인연금, 연차휴가수당 등이 일제히 올라 몇백여 수준을 지급하게 생겼다”(금융권 A사 인사팀장), “당장 2024년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대기업 B사 인사팀) 등 혼란이 크다.

이런 우려와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아직 없다. 통상임금을 대폭 늘리는 ‘핵폭탄급’ 판례가 유예기간도 없이 떨어진 탓이다.

답답한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기업의 민원이 많은 만큼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지만 이달 중에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지침에 모든 케이스를 담지는 못할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 변경 후폭풍

유예 기간도 없이 판결 나온 탓
로펌 세미나 간 기업들, 질문 폭주
“실적 성과급, 통상임금 제외 유력
명절상여는 다른 소송 결과 봐야”

‘통상임금 판결’ 부담 얼마나 느나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차후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를 받아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혼란은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최근 한 달 새 열린 김연장·세종·울촌·태평양·광장·바른 등 국내 대형 법무법인 통상임금 세미나에서도 인사팀의 질문과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 5일 온라인으로 통상임금 세미나를 연 울촌 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장 참석자가 많은 세미나였다”며 “3000명이 신청했는데 2500여명이 동시 접속을 했다”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①지급주기가 긴 명절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급 등 다른 항목도 차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늘지 ②당장 통상임금으로 갑자기 늘어난 부담을 어떻게 줄여나갈 지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상임금 적용에서 배제되는 다른 조건이 붙은 수당들도 향후 소송 및 다름

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갈지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소송 결과를 봐야 한다. 지급주기가 긴 명절상여금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성과나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로펌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늘어난 임금 부담은 근로자나 노조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김연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임금협상부터 고민일 것”이라며 “연장근로를 줄여 인건비를 감축하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성과 연동 임금 비율을 올리는 방식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늘어난 통상임금을 토대로 올해도 임금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결국 연장·야간 근로를 축소하거나 연차 사용

을 늘려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데, 노조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도 기업 현장에 영향을 줄 노동 관련 판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한 임금소송 판결이 대표적이다. 또, 원청기업이 협력업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하는 HD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정 한국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관련 사항은 노사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법원 판례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나 정부가 입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현장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u@joongang.co.kr

한은 “추경, 경기 둔화 대응 정도면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

경기침체 우려에 ‘적극 재정’ 힘써
적정 수준 규모 대해선 언급 안해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추가 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경 규모를 묻는 서면 질의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한은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의 추경 규모를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추경은 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경 편성을 요구하

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말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골드만 삭스, 바클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인 1.70%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트럼프 2기 출범 후 일괄 관세 부과하면 한국 수출 큰 타격”

신용평가사들 “대외 변수도
경제에 상당한 부담될 것”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통령 탄핵 추진 등 국내 정치적 혼란 이외에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동·우크라이나 분쟁 등 대외 여건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의 제러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전면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라) 미국의 소비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 같은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 실적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60%, 다른 나라들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글로벌 보호무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7월 13.5%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떨어져 지난 11월에는 1.4%로 둔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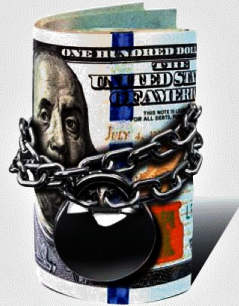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도 중국과 교역이 많은 한국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리튬·갈륨 등 배터리와 반도체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국내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웅탄 S&P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한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도 한국에는 골칫거리다. 김 이사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갈등도 향후 에너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주된 에너지원인 석유 등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운송, 난방 등의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희래 기자

연초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있다. 예상보다 뜨거운 고용과 물가에 돈을 풀 이유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악몽' 우려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4일 국제금융센터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난달 끝났고, 오히려 인상으로 기울어졌다"고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적어도 두 차례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수정한 것이다. BoA 전망대로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거나 인상으로 돌아서면 미국은 연 4.5% 이상(상단) '고금리 시대'가 이어진다. 앞으로 한국(연 3%)과의 금리 격차는 1.5% 이상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을 놓고 고민 중인 한국

미국, 금리인하 끝났나 1월 동결 확률 97% "인상 국면 진입" 전망도



은행의 선택은 더욱 꼬이게 된다.

다른 IB도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줄이거나 인하 예상 시점을 연기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올해 3차례(3·6·9월) 인하 전망 횟수를 상·하반기 한 번씩, 2차례 인하로 축소했다. 바클레이스는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인하 시점도 1분기에서 2분기로 늦췄다.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이유가 있다. Fed가 통화정책을 짤 때 중요하게 꼽는 '물가와 성장(고용)' 열기가 달아오고 있어서다. 지난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25만6000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15만5000명)를 크게 웃돈 데다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BoA는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Fed가) 추가로 금리를 낮출 이유가 거의 없다"고 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mailto:yjh@joongang.co.kr)

▶ B2면 '미국 금리'로 계속

'고용 호조' 미국, 매파 득세... 한은, 금리 선택도 꼬여

▶ B1면 '미국 금리'에서 계속

여기에 미국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하위 지수인 서비스업 가격지수가 지난달 64.4로 나타났다.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체 19개 서비스 업종 가운데 15개 업종에서 비용(물가)이 오른 영향이다. 시장의 관심은 15일(한국시간) 발표할 지난달 소비자물가(CPI)에 쏠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CPI가 1년 전보다 2.9%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월(2.7%)보다 0.2%포인트 높다. 예상치

에 부합할 경우 CPI는 석 달 연속 증가 폭이 커진다. BoA는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굳어질 경우 Fed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Fed 위원들의 매파(통화긴축 성향)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미셸 보먼 이사는 최근 "지난해 12월 금리 인하 결정은 정책조정 단계에서 마지막 조치를 나타낸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Fed 목표인 2%를 상회한 데다 둔화세 진전이 지난

해 멈췄다"며 "(통화정책 조정에 있어)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미국이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동결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한국 시간으로 14일 97.4%에 이른다. 일주일 전(93.6%)보다 더 높다. 1월에 이어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도 같은 기간 61.8%에서 77.9%로 뛰었다.



배럴당 80달러 치솟는 국제유가 5개월만에 최고

美, 러시아산 원유 제재 후폭풍

국제 유가가 3% 가까이 오르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선 여파로 풀이된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8.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2.25달러(2.9%)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8월 12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다. 3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81.01달러로 1.25달러(1.6%) 뛰었다. 브렌트유 역시 지난해 8월 26일 이후 최고치다.

미국 정부가 10일 가스프롬을 비롯한 러시아 석유 업체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선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10일부터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6.5%, 5.3% 뛰었다. 이번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오던 중국, 인도가 원유 수입 경로를 중동이나 미국 등으로 변경할 경우 국제 유가가 더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 값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매일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705.14원으로 전날보다 2.85원 올랐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로보락·샤오미비야다... 한국 안방 공략하는 중국산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야디(BYD)의 '아토 3'가 13일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국내 출시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6일 BYD코리아 공식 출범과 함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 업체 샤오핑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가성비 높아서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중국 전자제품 업체 샤오미는 한국지사 설립에 이어 새 스마트폰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 대표 생필품 소매 브랜드 미니스도 서울 대학로에 첫 매장을 열었다.

중국산 공급이 이어지며 자칫 안방까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은 중국 업체 로보락이 장악했다. 점유율이 45% 안팎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로보락은 로봇팔이 달린 청소기까지 최초 공개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도 절반을 넘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건 생산량은 넘치는데 내수 소비는 부진하고 미국과 유럽 수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무차별 지원은 과잉 생산

설비를 낳았다. 그러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를 소비할 길은 없다. 더구나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100%로, 유럽도 45%까지 올렸다. 중국 입장에선 다른 시장으로 자가 밀어내기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 지리상 가깝고 선진 시장 시험대 역할도 할 수 있는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다.

트럼프 2기 미중 관세전쟁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까지 관세 장벽을 높일 순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 여전히 중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탐대실일 수 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여 당당하게 겨룰 수밖에 없다. 안방 시장이라고 안주할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기술 경쟁력까지 갖춰가고 있다. 물론 국내 업체들이 오히려 불이익이나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중국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도 정부가 살필 부분이다.

'MAGA 파트너'로 뛰는 韓 기업들, 희망은 있다



오늘과 내일

정임수 논설위원

전 세계의 시선이 닷새 뒤면 개막하는 '트럼프 2.0 시대'에 쏠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세계 질서를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출범도 전에 25%의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며 캐나다 총리를 무너뜨렸고, 북극권 전략 요충지인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중국의 주요 무역 통로인 파나마 운하를 손에 넣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노골적 영토·관세 압박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매기는 보편관세 추진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동맹국의 주권도, 세계 질서도 신경 쓰지 않는 패권주의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방위로 몰아칠 '트럼프 스톰'에서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보편관세 부과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대중 수출 통제 동참 압박 등 트럼프가 꺼내들 카드에 따라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비해 외교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계엄·탄핵의 후폭풍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대응이 출범 후 100일도 아닌 100시간이 끝난타임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권에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비상 시기에 글로벌 최전선에 있는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이 대(對)트럼프 외교의 길을 트고, 미국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로 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SK·LG·현대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기조에 발

맞춰 일찌감치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며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보험' 들기에도 나섰다. 현대제철이 수조 원을 들여 미국에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짓기로 결정한 건 트럼프에게 깎짝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군분투 기업들이 '위기 버팀목'

최근 KOTRA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트럼프 2기에서 대미 투자를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정이라는 답변도 30%가 넘어 향후 현지 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들이 'MAGA 태풍'에 무작정 휩쓸리기보다 미국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는 'MAGA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콕 짚어 언급한 한국 조선업을 비롯해 방산, 원전 분야도 트럼프 파고를 넘을 기회로 꼽힌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 군함을 대폭 확대하려는 트럼프 2기 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 조선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화오션이 발 빠르게 움직여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 사업을 잇달아 따냈고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도 마무리했다. 러시아·중국에 밀리는 원전 건설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 간 '원전 동맹'이 체결된 가운데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 기업들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되면 반도체·배터리·항공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SOS를 치는 분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트럼프 2기를 상대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못난 정치'는 기업을 밀어주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 최소한 상반기 내내 정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한강의 기적'을 만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으로 트럼프 스톰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 기업의 버팀목 역할이 더 절실했다.

ims00@donga.com

한국경제 골든타임, 10년도 안 남았다

중앙시평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적 혼란으로 정부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이 일 분일초 낭비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절벽 위에 서있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심각한 징후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두 지표 모두 2위와 상당한 격차가 나는 압도적인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특히 20대 사망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한 것이다. 출산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청년들은 자손을 남기기 위한 본능을 갖기 전에 극심한 경쟁 압력 속에서 사회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둘째,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전례 없는 속도로 소멸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와 경제력 창출, 그리고 일자리와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57%에 해당하는 130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고령화의 청구서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885억원씩 쌓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24년 98.7조원에서 2033년 197.4조원으로 10년 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 해인 2014년 7조원에서 올해 26조원이 넘었고, 5년 후에 40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외 환경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기조 아래 관세를 무기로 자국 내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2차전지, 석유화학, 조선, 메모리반도체 등 모든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단 하나

**자살률·출산율, 지방소멸, 부채 등
절벽 위의 우리 사회 징후들 뚜렷
2차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머무는
향후 10년이 우리 경제 전환 기회**

의 기업이 AI 데이터센터에 10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 기후위기의 위험성은 LA 산불 사태에서 보듯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한반도 주변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되었다.

지금의 정치 혼란이 87년 체제가 낳은 제6공화국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면, 경제사회적 난맥상은 97년 외

환위기 직후 재편된 경제구조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체력과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향후 10년에 걸쳐 은퇴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당장 2027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다. 결국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지금이 우리 경제의 마지막 기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골든타임, 우리의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철저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주택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대출 규모에 따라 움직인다. 정책대출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며 시장의 연착륙을 방해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재정을 써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둘째, IMF 외환위기 직후 인터넷과 IT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2000년대의 먹거리를 마련했듯이, 국가의 모 든 자본과 역량을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건설 투자로 거시경제지표만 일시 개선하는 관행을 끝내야 할 때다. 전국의 인프라가 어느

선진국보다 최신 사양이라고 아직도 못 느꼈는가. 미래세대의 소득으로 연결될 산업육성에 올인해도 재원이 모자라다. 셋째, 국민연금개혁을 연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과 같이 인구성장기에 설계된 우리 사회의 재정구조를 인구축소 사회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

우리의 중위연령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30.3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6.7세를 거쳐 올해 46.7세로 급격히 상승했다. 불과 5년 후면 인구 절반이 50대 이상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과 활력이 떨어지듯, 우리 경제도 대내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구조적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전 국민 소 비지원금, 부채증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과 건설투자는 경기하강의 고통을 잠시 완화하는 진통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의 발판을 허무는 일이다. 암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한다고 암이 완치되지 않는다. 외과적 수술과도 같은 산업구조개혁과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발굴에 자본과 인력을 집중할 시간이다. 10년도 남지 않았다.

1%대 저성장 시대, 어떻게 봐야할까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경제부 기자



“어느 정도 성장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다가 학생에게 한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되물었다. 질문한 학생은 “연 6% 성장률이 적당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뒤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중심의 과거 고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던 것이다. 이 총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면서도 “현재 잠재성장률은 2% 정도”라며 눈높이를 낮췄다.

한 나라는 보통 급격한 성장의 시대를 거쳐 선진국이 된다. 그 이후로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한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10% 안팎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기록했으나 국내총생산(GDP)이 1조3000억달러를 넘어선 2010년대 초반부터 3%대 밑으로 내려갔다.

한국이 6% 넘게 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저효과가 있던 2010년(7.0%)을 제외하면 2002년(7.7%)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6%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이다.

1.9% 성장률의 의미

한국은 올해 1%대 성장률을 피하기 어렵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말 1.9%, 정부는 이달 초 1.8%를 전망했다. 이 같은 수준의 저성장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당국자들은 그렇다고 본다. 이 총재는 최근 1.9% 성장률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1.8%를 웃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 성장률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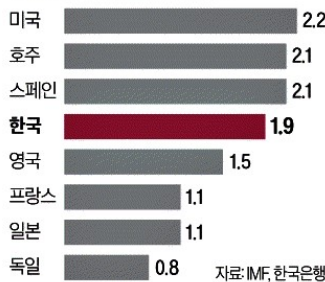
IMF의 지난해 10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선진국은 1%대 이하 성장률이 예상된다. 독일(0.8%)과 이탈리아(0.8%)는 0%대가 우려된다. 한국은 뉴질랜드(1.9%)와 함께 13위로 딱 중간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변수

하지만 이 같은 숫자에는 아직 고려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다. 탄핵 정국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내릴 요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이를 반영해 잇달아 전망을 낮추고 있다. JP모간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단위:%)



자료: IMF, 한국은행

를 1.7%에서 1.3%로 내렸다. 모건스탠리와 씨티, 캐피털이코노믹스 등은 1.5%를 전망했다. 환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전문가 20명이 제시한 평균 성장률은 1.65% 수준이다.

IB 전망치 중 최저 수준인 1.3% 성장이 현실화하면 26개국 평균보다 낮았던 한국 성장률은 평균(1.8%)을 크게 밑돌게 된다. 순위도 13위에서 19위로 내려가 하위권으로 추락한다. ‘위기’라는 판단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1%대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도 그것이 1%대 초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1%대 초반으로 내려가면 경제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주체의 심리를 회복하는 일도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단기적 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한은이 이례적인 3연속 금리 인하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고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한은에 따르면 2024~2026년 2.0%로 추정된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로 떨어지고 2040년께 0%대에 진입한다. 1%대 후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조차 도전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교육, 산업 재편 등과 관련해 분야를 넘나들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오늘의 TOP 뉴스

언론사	제목
경향신문	윤석열 체포, 턱밑까지 왔다
국민일보	‘尹 체포’ 3자 협의 불발... 한남동 긴장 고조
동아일보	尹체포 오늘 집행할듯, 경찰 3700명 출동 준비
매일경제	美국채금리 급등... 서학개미 곡소리
머니투데이	관세로 전세계 길들이기 트럼프 청구서 쏟아진다
서울경제	48조 민간임대' 투자 못하는 국민연금
서울신문	尹 체포 이르면 오늘 재시도 “軍, 출입승인” “사실 아니다”
세계일보	尹 체포 일촉즉발... 전운 감도는 관저
아주경제	강달러 장기화...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이데일리	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 경영 리스크 현실로
전자신문	스타링크 이어 원웹, 韓 온다..위성통신 시대 눈앞
조선일보	尹 체포 오늘 시도할 듯... 충돌 우려
중앙일보	1000명 대 500명
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 사고 최대... 100건중 9건 돈 떼였다
한겨레	‘윤석열 체포’ 초읽기...경호처, 충돌 불사
한국경제	AI가 불치병까지 고치는 시대 열린다
한국일보	경찰·공수처, 영장 2개 들고尹체포 작전